

‘귀멸의 칼날’에 2030이 열광하는 이유

에스프레소

이 동 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이 올해 국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은 지난 22일 누적 563만8000여 관객을 기록해 한국 영화 ‘쫄비탈’을 제쳤다. 우리 나라에서 애니메이션이 박스오피스 연 1위를 차지하는 이번이 처음이다. ‘귀멸의 칼날’은 일본 다이쇼 시대 소년 검사(劍士)들 이야기다. 주인공 탄지로는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인 ‘혈귀’에게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여동생도 도깨비가 된다. 여동생을 사람으로 되돌리기 위해, 탄지로는 도깨비 잡는 부대인 ‘귀살대’에 들어가 분투한다. 주인공이 동료들과 성장해 나가며 거역에 맞서는 플롯은 일본 소년 만화의 전형이다.

일체적 캐릭터는 이 작품의 매력으로 꼽힌다. 혈귀들은 비록 인간을 잡아먹는 악당이지만 저마다 사연이 있다. 인간 시절 겪은 가난과 차별, 가족 잃은 원통함은 도깨비가 되고 난 후 악행의 기제로 작용한다. 가해자가 된 피해자 이야기는 우리나라 공포물에서 접할 수 있는 한(恨)이라는 정서와도 닮아 있다. 주인공은 혈귀들의 안타까운 과거에 연

민을 갖지만 심판을 미루지는 않는다. 그들이 사람을 해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악행과 단죄’는 귀멸의 칼날의 뼈대를 구성하는 핵심 서사다.

주요 팬층은 2030세대다. 이들은 왜 일본 검사 이야기에 열광할까. 사람들은 만화나 소설, 영화 같은 가상 이야기를 통해 현실에서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권선징악으로 압축되는 귀멸의 칼날의 교훈은 이런 점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권선징악 없는 현실의 보상심리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정치권은 왜 악당들을 비호하나 청년들은 정의·공정을 요구한다

치른다는 단순한 메시지는 지금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에게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전한다.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고 착한 일을 하면 비보 취급 받는 시대 아닌가.

한국의 검사(檢事)들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범죄자들이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 대부분을 챙길 길을 열어주었다. 일당은 동결된 자기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여권은 애써 피해액을 축소하고 “민사로 환수하면 된다”는 한가한 소리를 늘어놓는다. 대한민국에서 악당들은 처단되지 못하고 오히

려 정치권의 비호를 받는다. 어디 대장동만 문제인가. 임시 비리, 개발 비리로 수사받은 정치인들은 열사 내지는 송고한 피해자로 둔갑한 지 오래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 후원금을 횡령해도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정의와 공정을 요구하는 청년들엔겐 “능력주의에 찌든 국유”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정부 여당은 일부 정치 검사를 문제 삼아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든다.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행한 이후 자본시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주요 경제 범죄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치솟았다는 사실에는 눈을 감는 모양이다. 검찰 입건 마약 사범도 2020년 5974명에서 2023년 8342명으로 39.6%나 증가했다. 사기꾼과 마약 사범이 속출하는데 수사 지휘 공백으로 검찰과 경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피해자들은 탐정 역할을 해줄 변호사를 찾는 등 자력 구제에 나서고 있다.

검찰청 폐지로 국민적 피해가 커질 거라는 우려에도 정부 여당은 들은 채도 안 한다. 진영 논리라는 도깨비는 상식을 파괴하고 민생을 갉아먹는다. 범죄자는 비호받고 수사와 재판을 담당한 판검사는 모욕을 당하는 기이한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나라에서 권선징악이 제대로 실현되길 기대하는 건 욕심일까.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정의와 상식의 칼날’을 휘둘러줄 검사는 어디에 있는가.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608]

우리가 서로에게 쏜 ‘화살’

초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회화의 거장 안드레아 만테나(Andrea Mantegna·1431~1506)가 그린 성 세바스티아노다. 3세기 로마 제국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근위대장이던 그가 기독교인임을 알게 되자 화살을 쏘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전설에 의하면 기둥에 묶인 성 세바스티아노는 ‘고슴도치처럼’ 수많은 화살을 맞았지만, 기적처럼 살아남았다. 이후 그는 당당히 황제 앞에 나아가 죄를 꾸짖고 결국은 몽둥이에 맞아 숨졌다고 한다.

성 세바스티아노는 4세기부터 군인과 운동선수의 수호 성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흑사병이 창궐한 중세 이후로는 전염병을 막아주는 성인으로 추앙받았다. 흑사병이 어디선지도 모르게 갑자기 날아들어 피부를 꿰뚫는 화살처럼 치명적인 뿐 아니라, 피고름이 흐르는 종기가 마치 화살 자국 같았기 때문이다. 온몸에 화살을 맞고도 일어난 성 세바스티아노는 현대 의학 이전, 온갖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운명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이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실제로 만테나는 당시 그가 살던 파도바를 덮친 흑사병에서 살아남았고, 전염병이 물러난 이후

파도바시로부터 이 그림을 의뢰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최초로 보고된 게 2019년 11월이다. 그때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마치 하늘에서 쏟아져 내리는 화살처럼 온 인류에게 무차별 공격을 퍼부어 줄은 몰랐다. 전염병도 무서웠지만 팬데믹 초기 어쩌다 화살을 먼저 맞은 이들에게 쏜 아진 냉대는 지금 생각해도 오작한다. 우리가 서로에게 쏘아 던 바란의 화살이 어쩌면 바이러스보다 더 아픈 상처를 남긴 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안드레아 만테나, 성 세바스티아노, 1457~1459년경, 목판에 템페라, 68×30cm, 바티칸 미술사 박물관 소장.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社 說

월세 1300억원만 날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이 500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복구에 259억원, 그 빈자리에 국방부가 다시 들어오는 데 238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 든 비용이 800억원이었다. 총 1300억원이 낭비되는 것이다.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은 명분이 있었다. 청와대는 국민과 소통하며 일하는 곳이 아니었다. 불통과 제약적 대통령의 상징이 었다.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돼 있었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무엇을 하는지 국민은 물론 출입 기자도 알기 어려웠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본관과 비서들이 일하는 여민관 사이 거리도 500m가 넘었다. 미국·영국 등의 정상 집무실이 도심 한복판에 있어 국가 지도자의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크기도 25만㎡로 미 백악관(7만3000㎡)의 3.4배다. 영국 다우닝가의 총리 관저는 연립주택식 3층 건물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실 이전을 공약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나온다고 했

대통령이 북 주민은 인터넷 못 쓰는 것도 모른다니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외 기자 간담회에서 “대북 방송 왜 합니까, 쓸데없이”라며 “그런 바보짓이 어디 있어요”라고 했다. “요즘 세상에 인터넷 뭣지면 다 나오는데 뭘 대북 단파방송을 합니까, 그것도 돈 들잖아요”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북 확성기 중단, 전단 단속에 이어 국가정보원이 50년간 해오던 대북 라디오·TV 방송도 모두 꺼버렸다.

북한은 주민의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다. 싱가포르 데이터 분석 기관에 따르면, 북한의 인터넷 사용자는 1000명 미만이라고 한다. 세계 최하위다. 김씨 일가 등 극소수 특권층만이 인터넷을 쓴다. 연구원 등이 인터넷에 접속하려면 특급 기밀에 접근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다른 정보를 검색하지 않는지 철저한 감시를 받는다. 탈북민들의 증언이다.

나머지 99.9% 주민은 외부로 연결된 인터넷은 쓰지 못하고 내부 통신망에만 접속할 수 있다. 내부망에는 외부 정보가 하나도 없다. 평양의 외국 대사관 주변엔 휴대전화를 들고 배회하는 주민이 적지 않다고 한다. 혹시 무선 인터넷이 잡힐까 기대하는 것이다.

수백·수천 하청 노조와 교섭하라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예고된 일이지만 노사 교섭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해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조도 원청 회사와 교섭을 가능하게 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이다. 반발과 비판이 커지자 노동부는 시행령 등으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행령을 보니 비판을 수용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노사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하청 노조도 원청 회사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런 시행령이라면 기업들은 1년 내내 원청·하청 노조와 교섭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대자동차의 경우 1차 협력사가 300여 곳, 2·3차 등 협력사까지 포함하면 8500여 하청 업체를 두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420곳, 삼성중공업은 1430곳, 한화오션은 1334곳에 달한다. 이들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파업을 벌일 수 있다. 글로벌 초경쟁 시대에 기업의 발목을 잡아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이미 법을 시행하기도 전인데 “원청 기업이 나서라”는 노조

을 때 많은 국민이 동의했다. 그런데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등 대안이 많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 청사를 고집했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태에서 다른 곳도 아니고 국방부를 통째로 옮기는 무리를 왜 하나. 국방부가 옮기면서 합동참모본부도 또 옮겨야 했다. 모두가 중대하고 복잡한 군사시설이다.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애초에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반대했고 보안·의전에도 적합하지 않아 청와대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나 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정부가 있었던 곳을 쓰기 싫은 게 속마음일 것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실이 나간 뒤 공원으로 개방됐다. 수많은 사람에게 공개된 이곳으로 복귀하면 보안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많다. 청와대 복귀는 다시 구중궁궐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이 워낙 황당한 일이었던 탓에 이 정부의 청와대 복귀에 반대 목소리도 별로 없는 실정이다. 윤 정부의 무리한 용산 이전과 이 정부의 청와대 회귀로 결국 국민 세금 1300억원만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다.

대북 방송은 인터넷 등 외부 정보와 완전히 차단된 북 주민에게 바깥 소식을 전해주는 유일한 통로였다. 탈북민 상당수가 대북 방송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자유세계 소식을 접했고 ‘인권’이란 말의 뜻도 알게 됐다. 수용소로 끌려갈 위험을 무릅쓰고 단파방송을 들었다. 탈출에 성공한 뒤 대북 방송을 한 분을 은인이라며 찾아 나선 탈북민도 있다. 북 주민은 김씨 왕조 비난보다 세상 사는 이야기, 연속극, 정확한 알기예보 등에 더 끌렸다. 한국 드라마 요약본만 보고도 자신들이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도 대북 방송은 끄지 않았다. 그 것이 ‘바보짓’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았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2020년 ‘반동사상배격법’을 만든 뒤 한국 드라마를 보거나 퍼뜨린 주민을 심하면 처형까지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김정은과 협상을 해보려는 생각 자체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북한 주민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는 초보적인 북한 실상조차 모르면서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할 따름이다.

압박이 많은데, 법을 시행하면 전국 사업장에서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섭 단위가 늘어나면 교섭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는 것은 상식이다. 하청 노조 교섭 테이블이 여러 개로 나뉠 경우 이해관계 조정이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은 이것만이 아니다.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도 하청 노조들의 과도한 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노조의 폭력 행위나 작업장 점거 등이 다시 만연할 우려가 있다. 또 이밖에 노란봉투법을 만들면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경영계에서는 인수·합병이나 공장 이전, 해외 투자 등까지 노조 파업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은 졸면 죽는 글로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뒤에서 노조 편만 들고 있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내년 시행 전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을 하겠지만 민주당이 응할 리 없다. 막대한 가계 부채, 환율 불안, 부동산 불안, 트럼프 관세, 엄청난 대미 투자 부담 외에 우리 경제에 무거운 짐이 하나 더 올려졌다.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

무너져 내리고 있다, 국가의 자살? ... 오로지 코스피 상승에만 혈안

원화 가치 폭락 → 환율 급등 → 외환 위기? | 성장 엔진 꺼져가고, 국가 채무 급증, 국가 정체성도 위협받고 | 실패한 국가서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

뉴데일리
newdaily.co.kr



◀ 전무후무한 기적의 역사가 막을 내리는 것인가. 이재명 정권은 역전 국장굴이 아니라 자살굴 날기 일보 직전이다.
© 챗Gpt

■ 문재인 정권 1층, 이재명 정권 지하실

문재인 정권 시절 “**개인이 자살하는 것은 봤어도 국가가 자살로 가는 것은 한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다**”는 어느 외국인의 말이 화제가 됐다. 같은 좌파라도**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보다 훨씬 위험하고 무능하며 망국적인 최악의 정권**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다시 좌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그보다 막가는 정권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1층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 12월 이번 출범 6개월을 맞는 **이재명 정권은 그야말로 《1층 밑 지하실》**이다.

최근 한국의 추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원화 가치 급락》**이다. 우리 돈이 휴지 조각으로 녹아간다는 말도 나온다. **곧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상황도 아닌데 그렇다. 돈을 살포하는데, 원화까지 급락까지 접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외식물가나 밥상물가는 오르고 또 오르고 있다. **실패한 국가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패턴**이다.

반(反) 기업적 악법이 쏟아지고 기업 심리가 위축되면서, 투자와 고용에 모두 빨간 불이 켜졌다. 현 정권은 **주가라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쓴다. 하지만 경제-기업 체력이 허약해지는 상황에서 지속적 주가 상승은 힘들 것이다. 이런 식 좌파 포퓰리즘으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맨큐의 경제학**》을 비롯 모든 경제학 책은 내던져야 한다. **노벨 경제학상도 따 놓은 당상**이다.

정치와 사회 쪽으로 눈을 돌려도 **“정말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나온다. 좌익세력 장악 국회에서 만든 악법들을 토대로 자유 대한민국 국가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작업이 거칠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법치의 외피는 갖추었을지언정, 내용은 **반(反) 법치주의적-인권탄압적-편향적 법 집행**이 경찰-검찰-특검-공수처-법원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북 좌익이 우파를 고소고발하면, 득달같이 체포-구속한다. 좌파에 대한 고소고발은 시간을 끈 다음, 면죄부를 주곤 한다.

■ 얼마나 대단한 기적인데...

20세기 경제 기적으로는 독일의 **《라인강의 기적》**이 대표적이다. 일본의 **전후 부흥**도 경이적이다. 두 나라는 2세기 초에 세계적 강국이었다. 전쟁에 패했지만 인적 자원과 노하수가 있어 전후 부흥은 시간문제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은 불가능에 가까운 진정한 기적**이다. 국수주의 학자들은 **《이제 조선》**을 칭송하지만, 조선 후기

역사를 읽다 보면 한숨만 나온다. 무능한 국왕과 신하들이 저항 한 번 안하고 나라를 헌납했다. 해방 후에는 분단됐고, 북한의 남침전쟁으로 나라는 잿더미로 변했다. 4.19~5.16 사이 사회를 묘사한 소설들에는 부모가 시골에서 등골 빠지게 마련한 돈으로 변대한 대학을 졸업한 **《하얀 손의 실업자들》**이 등장한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이 성취한 기적은 세계의 어떤 학자나 연구기관도 예상하지 못한 경이적 기록이다. 국토는 좁고 부존자원은 부족한 나라, 전쟁의 폐허 위에서 원초적 자본축적의 기반도 갖추지 못한 나라, 수도 서울 바로 위 호전적 공산 전체주의 정권과 대치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한 세기만에 선진국을 따라잡는다? 누가 상상할 수 있었을까.

■ 국가와 국민의 자살굴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성장엔진은 꺼져가고,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국가 정체성은 위협받고** 있다. **《천재지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자살굴 성격이 짙다**는 점이 더 뼈아프다. 국운 상승기를 얼마 지나지 않아 급격한 쇠퇴를 지켜봐야 하는 심정은 참으로 무겁고 비통하다.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성취의 단물을 빨아먹는 데는 재빠르면서, 건국-호국-경제 기적의 역사에 침 뱉고 북한의 참담한 현실은 애써 외면하는 **중북 좌파와 그에 부화뇌동하**

는 **《매선 좌파》**들은 **도대체 뭔가**. 그런 자들에 빌붙어 한 자리 하겠다며 소신도 결기도 없는 **기회주의자들은 또 뭘**가. 한국이 **《매부리고 비결한 돼지》로 전락, 《배고프고 이빨을 드러내는 늑대》에 잡아먹힌다면**,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얼치기 좌파나 기회주의자들 역시 살아남기 힘들 것임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

■ 불꽃 같이 타올랐다 한순간에 꺼지는가

《**대장동 항소 포기 / 공무원을 휴대전화 및 PC 검사 / 군(軍) 장성 진급 심사 시 황당한 질문**》 등 어처구니없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역사의 연구**》라는 명저를 남긴 아놀드 토인비의 “**문명은 타살이 아니라 자살로 죽는다**”라는 말을 떠올린다. 정말 한국은 **《국가의 자살》로 치닫**하는 것인가.

《국가 자살》로 치닫는 저 거대한 폭주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들은 물론 후손들의 미래를 좌우한다. 그 첫 정치적 시험대는 **이재명 정권 출범 1년이 되는 내년 6월 3일**의 지방선거다.

■ 권 순 활
객원 칼럼니스트
권순활TV 대표 /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칼럼으로 2025년 11월 23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84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